

결혼정보회사 계약해지 쉬워진다... 위약금 비율 현실화

공정위 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 세분화 단순변심에도 가입비 90% 회수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게 이전보다 쉬워진다. 소개를 해주지 않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엔 가입비에 추가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시에도 위약금을 지금보다 덜 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라 위약금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가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결혼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내용	제5조(회원자격 보유기간)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 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구분	개정 후
내용	제5조(회원자격의 보유기간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 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률을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 기간 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신뢰가 깨져 계약 해지를 회

망 가능성이 크기도 계약해지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계약서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해지 불가'라는 계약해지 배제·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과 관련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회원가입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는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입비의 20%를 떼고 80%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프로필 제공 전 해지시'엔 90%를,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시'엔 85%를,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시'엔 80%를 돌려받게 된다. 단순 변심에 의한 가입해지시 기존엔 20%를 위약금으로 몰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10%만 내도되는 셈이다.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회사의 책임있는 사

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자는 회원가입비와 함께 회원가입비의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건 같지만, 앞으로는 '프로필 제공 전 해지시'엔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시'엔 15%를,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시 '엔 최대 20%까지 더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구제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한민국 식품대전' 20일 온라인 개최

농식품부 170개 기업 참여 '미래를 맛보다' 주제 기획

우리 전통식품은 물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최신 푸드테크를 경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식품대전이 20일 온라인으로 개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22일까지 사흘간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3 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여기업별 제품과 회사 소개, 유명 유튜브 리뷰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제품은 주문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판매 사이트와도 연계된다.

또 '식품정책 홍보관'에서는 정부의 식품·외식·한식 육성 정책, 수출 확대

정책 등 식품산업 분야별 육성, 지원 정책이 소개되고, '유관기관 홍보관'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서울시먹거리창업센터 등 식품산업 관련 14개 기관이 참여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푸드테크 특별관'에서는 김치 시즈닝, 대체식품, 저온 진공건조, 선도유지 포장재, 서빙로봇 등 식품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한 10개 기업 홍보 영상을 제공해 식품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 줄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 강연·토론회'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식품산업의 변화와 전망', '미래의 먹거리' 등을 주제로 한 발표, 토론회가 진행되고, 참여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구매자 상담회, 온라인 판매망과 연계한 판촉전도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부, 100대 건설사 작업현장 불시 감독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집중 점검

최근 경기 남양주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2명이 숨지는 등 올해에만 타워크레인 산업재해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워크레인을 올리거나 해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기본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주된 원인이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상승 작업 도중 산재사고 사망 건수는 총 5건이다.

타워크레인 사망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명에서 2016년 5명, 2017년 10명으로 늘었다. 이어 2018년 0명, 2019년 1명으로 감소하다 2020년 3명 그리고 10월 현재 5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공사현장내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다 부품 일부가 떨어지면서 6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경기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을 특별 감독하기로 했다. 또, 현장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사전 조사·작업 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 방지 조치 여부 ▲작업 과정 전반 영상 기록·보존 여부 ▲적재하중 준수 여부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P코로나 시대, 노동자 안전 문제 대비해야"

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

"배달업 종사자 등 안전 사각지대 놓여"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 중 하나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치열한 속도경쟁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다 사망을 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배달업 종사자 다수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종사자 중심의 플랫폼 노동자 안전과 건강보호, 온라인 유통시장 확장에 따른 물류센터 안전이 큰 관심사로 떠오

를 전망이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확대로 인한 실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대응 등 안전보건 문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고사망 예방 ▲디지털 기반의 작업장소와 안전한 재택근무 ▲산업보건 사각지대 종사자의 직업건강적 접근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했다.

또, 내년부터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오토바이 배달 플랫폼 종사자 사고예방 정책, 물류창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안전성 확보 방안, 건강한 재택근무를 위한 가이드 개발 연구 등 산업안전보건의 역할과 대응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 관측 지도 만든다

NASA 등 참여 국제 사전조사

정부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과 손잡고 수도권 초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입체적으로 관측하는 3차원 오염지도 만든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25곳 연구진과 공동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대기질 국제 공동 사전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조사에는 미국 항공우주국과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브레멘대학교,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사전 조사에서는 질산염, 유기 에어로졸 등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 및 원인물질을 측정·분석해 2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발생 과정을 규명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농협, 비대면 가축 경매 플랫폼 개발 추진

2024년 전국 가축시장 보급 목표

가축 경매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농협 경제지주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장으로 4개 축협을 선정했으며, 그 중 하동축협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테스트를 진행해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협은 ▲가축시장 스마트폰 응찰 ▲경매 실황 중계 ▲스마트 출하 안내 시스템 등 축협 맞춤형 플랫폼을 개발해 2024년까지 전국 가축시장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또 미래 축산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개발 완료 후에는 플랫폼 기



경남 하동 스마트 가축시장 /농협

능을 고도하는 등 가축시장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또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의 완벽한 구현을 위해 2021년에는 플랫폼 전산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시스템 안정화 및 전국 축협에 순차 적용, 이후에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